공모사업 휩쓴 전북 바이오, 도약 가능성 입증

과기부·복지부·농림부 등 다부처 공모 선정… 기술력·기획력 입증

내년까지 총사업비 2000억 목표… 전북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바이오 메카'로 도약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올해 1분기 바이오산업 분야 공모사업에서 총 4건이 선정, 총사업비 274.32억원(국비 163.66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도의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공모사업 및 '26년 국가예산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분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1단계' 사업 선정(총사업비 183.32억원, 국비 91.66억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 사업 선정(총사업비 38억원, 국비 38억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5년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선정(총사업비 33억원, 국비 21억원) △부처합동(법무부, 행안부, 농림부, 중기부) 추진 공모사업인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사업 선정(총사업비 20.22억원, 국비 13억원)을 포함한다.

첫 번째로,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1단계' 사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첨단바이오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통합 비임상 시험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로, '2025년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 사업은 농촌 유휴시설(상가, 공장, 폐교 등) 활용한 수직농장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가 추진하는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2025년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지역 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유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병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 산업 현황 조사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사업은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고, 남원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곤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기업이며,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판로 개척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1분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분기에도 적극적인 공모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5건(총사업비 940.5억원, 국비 793.25억원)의 사업이 선정 심사 중이다. 특히, '미래 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총사업비 및 국비 145억원),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총사업비 30억원, 국비 15억원) 사업 등은 선정 가능성이 높은 핵심 과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등 부처별 수시 공모사업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 바이오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각 사업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비수도권 의료기관 최초 '2등급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첨단 의료 기술 상용화 가능성 크게 앞당겨

전북대학교병원은 비수도권 의료기관 최초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군에서 '2등급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제로 운영되는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센터장 고명환)의 연구 인프라를 통해 이뤄졌다.

의료기기 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GMP 인증을 바탕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임상시험을 병원 내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GMP 인증 획득을 주도한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국가과제 지원으로 설립되어 젊은 임상의 의사과학자들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번 GMP 인증은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앞당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시·도의회의장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뜻 모아

문승우 도의장, 결집 이끌어

대한민국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 시·도의회가 전북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안 주요 골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도의 스포츠 인프라 활용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시·도의회의 선도적 역할 △중앙정부의 외교·재정·정책적 지원 촉구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유치 지원 등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제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뜻을 모으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전방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움직일 때"이며, "지방과 중앙이 손잡고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승우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전북이 앞장서고 전국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하계올림픽은 도내뿐만 아니라, 충남·북, 광주·전남, 대구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연대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올림픽 유치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직원 상담능력 강화·국민의견 반영 노력… 역대 최고 92.6점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2.1점이 상승한 92.6점을 받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공단이 속한 52개 준정부기관 평균인 90.4점보다 2.2점, 기금관리 유형 평균인 90.3점보다 2.3점을 상회하는 점수이다.

공단은 이러한 결과를 그간 전문 고객만족(CS)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객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제안, 국민연금자문단,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부터 고객 상담 빅데이터 분석과 상담 예측 모델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오상근 기자

동네상권발전소로 동네 상권에 '활력'

중기부, 군산 포함 전국 16곳 '동네상권발전소' 대상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북 군산을 포함한 전국 16곳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 사업은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에는 총 50곳의 기초지자체가 상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였고, 특히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의 경우 31곳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약 6:1)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들은, 전략수립형의 경우 동네상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주민들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형은 상권 내 조직화를 통한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유형별로 선정된 대상지는 전략수립형의 경우 △전북 군산시 △서울 서대문구 △강원 영월군 △강원 춘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총 9곳이 선정됐고,

네트워크형의 경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대구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광주 동구 △전남 강진군 총 7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시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 자원을 보유한 월명동 일원에서 군산 시간여행을 테마로 군산 문화재 야행,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체험,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로컬메이커스페이스, 로컬라이즈 군산 등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소통·작업·거주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스를 운영 등을 통해 군산의 역사적 감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전세희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동네상권발전소의 운영계획을 보면서 민·관이 연계한 자율적인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발굴된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발전시켜 지역상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첫 만기 해지 '첫 결실'

참여자 277명 만기 적금 수령… 월 저축액 10만원이 최대 500만원

2025년 두배적금 1300명 심사 중, 5월 중순 최종 선정자 발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첫 만기를 맞았다. 이번에 만기를 채운 청년 277명이 적금을 만기 수령하면서 사업의 첫 결실을 맺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도 지원금,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2023년 첫 사업 참여자 300명 가운데 277명이 2년의 납입 기간을 모두 채웠으며, 이들은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도비 지원금 240만 원, 그리고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개인사정이나 전출 등 중도 해지한 인원은 23명으로, 중도해지율은 약 7.7%에 불과하다.

청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A씨는 "처음엔 매달 저축하는 게 부담이었지만, 익숙해지면서 기대가 됐고 큰 돈을 모아본 게 처음이라 뿌듯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B씨는 "두배적금을 끝까지 해낸 것이 자신감을 줬고, 금융교육과 컨설팅 덕분에 소비 습관을 돌아볼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올해 진행 중인 2025년도 두배적금 사업에는 1,300명 모집에 1만 4,016명이 신청해 약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순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두배적금 사업이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홍역 유입 막아라'… 예방접종·여행 후 주의사항 당부

전 세계 홍역 유행 지속, 해외여행 관련 국내 홍역 환자 35명 발생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MMR)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5명(4월 5일 기준)으로 이 중 65.7%에 해당하는 23명은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 후 확진된 사례다. 이로 인해 가정과 의료기관 등에서 12명의 2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홍역은 기침·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발열, 콧물, 기침, 결막염, 구강 내 반점, 전신 발진이 주요 증상이며, 면역이 불충분할 경우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홍역 퇴치국으로 WHO 인증을 받았고, 전북은 2020년 이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해외 교류 증가로 인해 해외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방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전북자치도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에게 홍역 예방접종(MMR)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접종 또는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6주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생후 1세 미만 영유아는 면역력이 낮아 홍역 유행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국 2주 전(생후 6~11개월) 조기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행 후에는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로 먼저 연락한 뒤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환경청,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호, 옥정호, 동화댐, 월락(남원), 무주 도내 5개 상수원 주변지역의 농약잔류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잔류량 조사는 상수원 주변 토양과 수질을 검사하여 농약성분의 유출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오염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은 용담호, 옥정호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그간 조사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지역주민의 먹는물 등 생활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내 광역상수원을 포함한 5개소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별로 농경지 토양(4개)과 유출수(4개) 및 상수원 유입수(2개)로 총 10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농약사용량, 잔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다이아지논(살충제) 등 총 8종의 농약성분을 연 2회 조사한다. /오상근 기자